서울책보고, 헌책 회수통보… "전임시장 치적 지우기" 반발

위기의 공공헌책방

〈上〉 헌책판매 비중 대폭줄여

서울책보고 방문객 5년새 ⅓ 줄어
서울시, 31일자로 헌책판매 종료

서울시가 지난 2019년 문을 연 공공헌책방 '서울책보고'에서 헌책 위탁판매 비중을 대폭 줄이기로 결정하고, 입점 서점들에게 입고된 책을 회수할 것을 통보했다. 입점 서점들은 헌책방 운영부진을 타개하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채 공공적 기능만 대폭 줄이는 이번 결정은 전임시장인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적을 지우려는 의도같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오는 31일자로 서울책보고에서 헌책 판매를 종료키로 하고, 최근 공공헌책방에 입점한 헌책 판매 서점들에게 맡긴 책들을 전부 가져가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시는 운영 부진을 그 이유로 들었지만, 33개 헌책 판매 사업자들은 서울시가 박 전 시장 재임 시절에 '핫플레이스'로 잘 나가던 서울책보고를 못마땅하게 여겨 문을 닫으려는 것이라며 책을 가져가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서울책보고 방문객수는 2019년 31만명에서 작년 10만5000명으로 약 3분의 1가량 줄었다. 같은 기간 헌책 판매 실적은 21만권에서 4만2000권으로 80% 급감했다.

지난달 29일 시민들이 서울시의 공공헌책방 '서울책보고'에서 책을 읽고 있다. /김현정 기자

입점 서점 "실적 부진, 서울시 탓 독자 행사·홍보 등 찾아볼수 없어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 황당하다"

입점 서점들은 서울책보고의 운영 및 헌책 판매 실적이 부진한 건 전적으로 서울시 탓이라고 한 입으로 성토했다.

서울책보고 참여 서점 중 하나인 '공씨책방'의 사장 장화민 씨는 "이정수 전 서울도서관 관장 때까지만 해도 헌책방하고 독자를 연결해주는 행사가 많았는데 시장이 바뀌고 나서 그런 게 싹 없어졌다"며 "요즘에는 헌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또 현재 서울시가 '오세훈표' 밀리언셀러 정책으로 밀고 있는 '서울야외도서관'을 알리는 홍보물이 서울시내버스 음성 안내, 지하철 내 포스터, 시 소유 전광판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선전되고 있는 것과 대비되게, 서울책보고 홍보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공헌책방 홍보는 서울책보고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다"며 "야외도서관이 시민한테 호응받다 보니 책보고는 홍보 순위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장 씨는 "시장 바뀌자마자 헌책방 살린다는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이건 전임 시장 치적 지우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관계자 "홈피서 헌책방 홍보 중 치적 지우기 였으면 책보고 없앴을 것 서점 대표와 운영개선 논의할 것"

시 관계자는 "전 시장 치적 지우기면 서울책보고를 없앴을 거다. 그런데 책보고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단지 헌책 판매 비중을 줄이는 것이다"고 답했다.

입점 서점들은 판매 매출이 하락한 건 서울책보고에서 책 입고 작업을 제대로 안 해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장 씨는 "책방이 책을 주면 입고시켜줘야 손님들이 보고 찾아가는 데 입고가 안 됐다"며 "지난 몇 달간 10권 정도밖에 입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입점 서점들은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는 운영 개선안에 대한 논의 한 번 없이 당장 보관할 곳도 없는 수천권의 책들을 도로 가져가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장 씨는 "우리한테 미리 고지하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시가 비엠컴퍼니(서울책보고 민간위탁을 맡은 업체)랑 이야기해 일방적으로 책방에 통지만 했다"며 "의견 수렴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질타했다.

서울책보고에 약 6000권의 책을 맡긴 '숨어있는 책' 대표 노동환 씨는 "'매출이 부진하고 이용자 반응이 안 좋다'며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 황당하다"면서 "문제가 생기면 같이 의논해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A 씨는 "박원순 시장일 때 서울시가 거의 우리한테 읍소하다시피 해서 서울책보고에 참여한다고 했다. 처음엔 시장 바뀌면 공공헌책방 없어진다는 이유로 안 한다는 헌책방 사장들이 많았다"면서 "그런데 시에서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공공, 서울시가 하는 사업인데 시장 바뀐다고 사라지겠냐'고 설득해서 무리해 책을 사들여 갖다 놓았다. 그런데 이제 와 막무가내로 나가라는 게 어딨냐. 몰염치하고 몰상식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시 관계자는 "의사전달을 정확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낸 거다"며 "추후 헌책방 대표들과 운영 개선안을 논의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롯데케미칼, 2030년까지 기초화학 매출 30%로 낮추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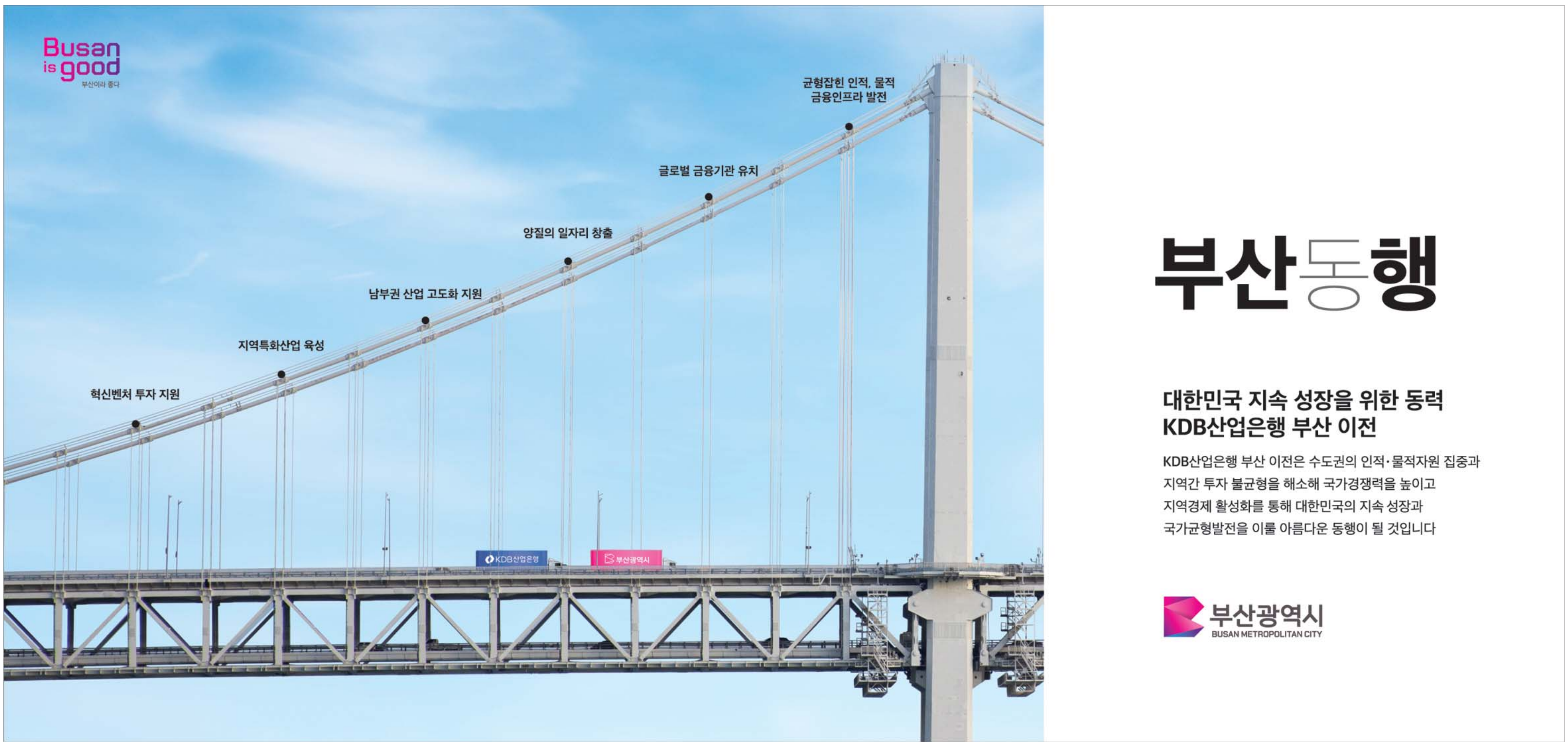
〉〉 1면 '롯데월드타워 담보…'서 계속

롯데케미칼은 각종 합성 수지 제조 원료가 되는 기초유분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해당 시장이 중국발 공급 과잉에 원가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점도 문제이다.

롯데케미칼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구조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60%대인 기초화학 사업의 매출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30%로 낮추고 첨단소재, 정밀화학, 전지소재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비중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여수공장 등 기초화학 제품을 만들었던 주요 생산 시설에 대해서도 가동률 조정 등을 포함한 원가 절감 프로젝트에 집중할 전략이다.

롯데그룹은 롯데케미칼 등 롯데 화학군 계열사 임원 30%를 감축하는 등 실적 악화에 대응해 인사 교체도 단행한다. 지난달 28일에는 이영준 롯데케미칼 첨단소재 대표이사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켜 롯데 화학군 총괄대표를 맡겼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롯데케미칼의 자금 유동성이 악화된 상태에서 적자까지 겹치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명확한 탈출구가 없는 상황에서 추가 차입을 통해 신사업을 모색하더라도 이는 결국 '차입금으로 기존 부채를 상환하는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그룹은 지난 11월 18일 일부에서 제기한 유동성 위기설과 관련해 "사실 무근"이라고 공시까지 내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